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 - 수도권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중심으로 -

Influencing Family on an Economic Decision-Making for the Elderlyhood Preparation -
Focused on 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of the Older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호서대 노인복지전공
조 교 수 이 선 형**
강남대학교
박사졸업 김 영 훈

Dept. of Elderly Welfare,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Lee Sun-Hyung
Kangnam Univ.
Doctor Kim, Young-Hu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was on the issues associated with family and economic decision-making, in particular for the elderlyhood which might have to (or could be) share the family resources. This study regarded 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as an economic decision-making. The data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320 persons (over age 55)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in 2008. We selected 227 cases to find the influence of family, having both spouse and adult-children. We have used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Fishbein to analysis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sults partially explain 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using Fishbein's theory. Second,

* 본 연구는 2009년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 이선형 (yisunh@hoseo.edu)

several results indicated that economic decision-makings within the family are influenced by several factors relating to other family member's view. They means that some of Subjective Norm variables, of Attitude Behavior ones, and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ones. Third, the result shows men and women respond differently to consider to applying for that policy. Men are conscious of the other people, i.e., friends, relatives except close family members, and, on the other hand, women are mindful of close family members, i.e., adult children. Forth, the group who have lower income showed higher intentions to consider that policy, when they have adult-children. Fifth, according to age group, pre-elderly group are influenced by consent of adult-children, a level of education, and on the other hand, elderly group are influenced by the other people, i.e., friends, relatives, a level of education, and so on. These results meant that these distinct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ey Words : 주택연금제도(Reverse Mortgage),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경제적 의사결정(economic decision-making), 노후소득보장(Old Age Income Security)

I. 문제제기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환경은 노후의 풍요로운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기간이 길지 않아 대다수의 노인들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식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의 전체소득 중 50.8%가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경우가 62.3%였다(김희삼, 2008). 같은 연구에서 연령대가 증가하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적은 소득이나

마 일을 해야 하거나 근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자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재의 노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주택을 무리해서라도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연간 소득부족액은 60~83세동안 약 9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주택보유율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73.2%인 것으로 나타나 타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10). 이에 따라 한국 노인들은 주택은 있으나 가용소득은 부족한(house-rich, but cash-poor) 전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 제도의 이용은 빈곤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어(Kutty, 1998; 김안나, 2007; 강성호·김경아, 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택연금제도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노인들은 이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제도 실시 전의 조사에서는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으로 '자식에게 염치가 없다'라는 응답이었으며(전체 응답자의 44%), 주택연금제도 실시 후에도 자식이나 주변의 반대로 제도이용을 취소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주택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이에 대한 자식에의 상속 경향은 제도이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에서 소유주택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족이 있는 노인의 89.5%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 응답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역모기지 제도 이용이 가능할지라도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어(Venti와 Wise, 1991), 노인들은 일정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소득증대보다 소비감소를 꾀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이용에 대해 가족간의 동의 내지는 양해를 얻은 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별이나 연령, 배우자유무, 소득 및 지출, 주택가격 등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인 변수와 이용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노후생활비예측, 노후생활불안도, 주택상속의향과 이용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일부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유선중·구본영, 2005; 김선주·유선중, 2006; 최은희, 2006;

김진철, 2007; 김영훈, 2008;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 Chen과 Jensen, 1985; Leviton, 2001). 특히 소유주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받게 되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자녀와 관련한 부분이 제도 이용의 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이용이나 선택 의도를 설명하는 피시바인의 계획된행동이론을 통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령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후소득보장문제와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세대적 관계

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일반가구보다 높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김태완·양시현·최현수·김문길·우선희·박은영,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1988년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20년 이상 불입을 요하는 완전연금을 타는 노인들이 2008년도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은 2009년 27.6%에 불과해(통계청, 2010)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노인 빈곤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이 유일한 노후소득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 수혜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이며 중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노후준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이선형·최은희, 2010) 중년층들에게는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길어진 평균수명, 짧아진 정년,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주택마련 및 자녀교육 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성숙을 통한 자연스런 노후보장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전체 인구의 14% 가량을 구성하고 있는 688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6-7년후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나 아직까지 소득에 대한 필요가 높아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서도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필요소득은 감소한다고 보지만 50대의 경우 은퇴는 하였으나 아직 노년기에 진입하지 않았고 자녀의 대학 및 결혼이 남은 이들에게 필요소득은 어느 시기보다도 높을 수 있다. 노후준비의 관점으로 볼때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40-50대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1,000만원을 육박하는 대학등록금, 이후에 있을 자녀 결혼을 위한 비용 마련도 대체적으로 이 시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청년층 세대는 자식에 대한 투자가 노후대비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양세정(2010)은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에서 적자가계중 24.1%가 자녀교육비로 인한 적자가계라고 하였으며(교육비형 17.8%, 송금형 6.5%) 이들 집단은 주로 4,50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 많은 송금형 집단의 경우 적자폭이 한달에 226만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저자는 가계적자를 야기할 수준의 과다한 자녀교육 관련 비용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

개 노후소득의 중요한 소득원은 자녀의 이전소득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경우 정상소득은 168만원으로 전국가구의 330만원의 51.1%에 해당하며 소득원천별로 볼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35.0%, 사업소득이 26.9%, 이전소득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는 건강 악화, 노인 일자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지금보다 더 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부모세대로의 자원이전은 청년층의 노후준비 소홀로 이어지고 현재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세대 간에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간단치 않다고 여겨진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노부모 부양문제와 자녀세대와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임정기·홍은진(201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부양에 관한 연구였지만 노부모 수발여부는 노년기 초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발하지 않는 경우가 수발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증가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수발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경제적 부양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부양행동은 서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 부양행동에 대한 최정혜(2009)의 한미 비교 연구에 의하면 한국이 전반적인 부양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분야별 부양행동점수를 살펴볼때 미국이 정서적 부양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한국은 경제적 부양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럽의 노부모 부양행동을 엿볼 수 있는 Attias-Donfut와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는 유럽 10개국의 50세 이상 성인이 노부모에게 시간과 금전을

어떻게 이전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시간자원만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89.5%)이었고 금전자원만(6.5%) 혹은 시간과 금전 모두(4.0%)를 이전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취볼 때 한국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문제는 동양적인 문화(최정혜, 2009)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은 노인세대의 빈곤문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교육비 등에 대한 자녀세대로의 과다 지출(이성림, 2005a, 2005b; 양세정, 2010) 등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력이라는 요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택연금과 가족의 경제적 의사결정

앞으로 노후준비의 관건은 충분한 노후준비를 통해 노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노인 세대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식세대의 노후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각 세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주택연금제도가 될 것이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게 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역모기지하고 차별점을 갖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07년(약 6개월)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한국주택금융공사, www.khfc.co.kr) 노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선택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택연금제도 이용 및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그리고 자녀관련 요인, 기타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로는 연령 및 배우자 유무, 은퇴유무를 들 수 있고(Chen과 Jensen, 1985; Kutty, 1998; Venti와 Wise, 1991; Ong, 2008; 김영훈, 2008), 재정적 요인으로는 소득, 순자산, 대출기관수, 주택감평가, 월지급액 등이다(Chen과 Jensen, 1985; Chou, Chow와 Chi, 2006; 최은희, 2006; 김진철, 2007; 김영훈, 2008;).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소득이 지급된다는 특성으로 주택상속과 관련하여 자녀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고(유선중·구본영, 2005; 최은희, 2006; 이선형·김영훈, 2009). 그밖의 변수로 자녀유무(Chou와 그의 동료들, 2006), 노후생활비지원(최은희, 2006; 김영훈, 2008) 등을 들 수 있다. 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으로 여태까지 살던 주택에 대한 애착,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문제나 의료비의 증가, 검소함, 부채에 대한 책임감, 독립적이고자 하는 욕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질적 연구도 있다(Leviton, 2001). 아직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주변의 체면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09).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관련 요인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주택연금제도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Chou와 그의 동료들, 2006)와 자녀 주택상속의향이 주택연금선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이선형·김

영훈, 2009)를 고려할 때 가족은 주택처분을 통한 생활비 마련이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택의 특성상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주택연금 시행 초기에는 자녀가 모르게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가 자식들이 알게 되어 가입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는 기사도 있다(Market & Money, 2011.01.29일자).

특히 주택연금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은 선택자 본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이선형·김영훈(2009)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로짓분석을 통해 55-64세 예비노인과 65세 이상 노인인 집단이 주택연금제도 선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예비노인은 주택상속의향과 자녀의 제도 이용 찬성정도가 영향을 미쳤고, 노인의 경우 주택상속의향 만이 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예비노인은 주택상속 의향이 낮은 집단과 자녀의 제도 이용 찬성정도가 높은 집단의 제도 이용의향이 높았고, 노인의 경우 주택상속의향이 낮은 집단의 이용의향이 높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자녀의 제도 이용 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인 노후에 대한 의사결정이지만 여기에는 가족적 고려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3. 피시바인의 계획된 행동 이론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피시바인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응용해볼 수 있다. 피시바인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젠에 의해 개발된

이론이다(Ajzen, 1985; 1991).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이 이론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도와 태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박정원·이인자, 1998; 채구묵, 2003; Ajzen, 2005). 이는 기존에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개인의 의지에 의해 행동이 완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전제를 보완하여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주택연금제도에 응용한다면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대한 고령자의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이하 AB)가 긍정적이고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주관규범(subjective Norms; 이하 SN)이 긍정적일지라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고령자 본인의 수용의사와 자산관리, 노후준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이하 PBC)의 변인으로 새로운 제도의 수용도, 자산관리 및 노후준비 결정 의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행동에 필요한 내외적 통제요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통제요인의 지각 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즉 주택연금제도를 선택할 때에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편익(benefits)과 희생(costs)을 비교하여 그 편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행동할 수 있다. 즉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얻는 소득이 주택상속의 포기, 가족간의 갈등, 사회적인 체면 손상과 같은 희생과 비교하여 편익이 적다고 판단할 때 주택연금제도 선택에 대한 태도(AB)에 영향을 미쳐 이를 이용할 의향은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태도에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SN)은 주변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해 한 개인이 어느 정도 순응하느냐로 측정될 수 있다. 주변사람이라 함은 특히 직접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및 자녀가 주요한 준거인이 될 것이다.

피시바인 모델을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응용한 연구에서는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김영훈(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연금관련 태도와 규범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낮고, 수도권 남부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적 결과)와 주관적 규범(준거인) 그리고 의식적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보면, 연소노인의 경우 수도권 남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행동에 대한 태도(긍정적 결과)와 의식적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주택연금제도 이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시바인 모델을 응용한 것은 아니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용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택연금제도 가입을 위해 주변사람과 의논한 경우가 90.4%로 가장 많지만, 배우자 이외에 자녀와 의논한 경우도 64.8%가 되어 상속 대상자인 자녀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공사, 2008). 또한 남성들은 가족보다는 주변을 더 의식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택연금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의사결정 중 주택연금제도를 택하여 주택연금제

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명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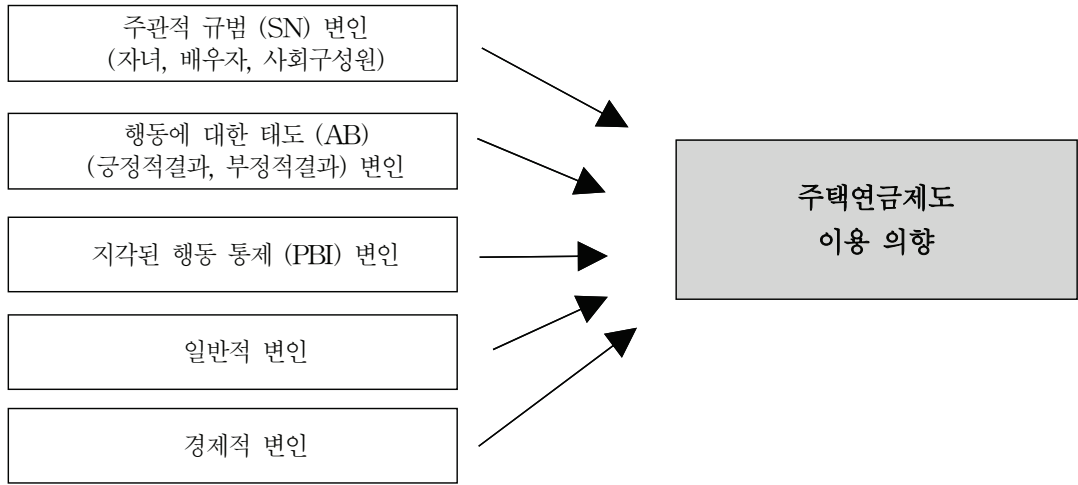
2)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3) 고령자의 특성별로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떻게 다른가? (고령자의 특성 : 성별, 소득 수준, 연령)

2.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며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80세 이하의 남녀 고령자 6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으며 설문조사후 597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서울북부, 남부, 수도권 북부, 남부로 할당표집 하였으며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한강을 기준으로 하고 각 지역의 인구분포를 참조하였다¹⁾.) 응답자중 본 연구의 조사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문항을 모두 응답한 2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 문항에 응답한 경우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서울 북부(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울 남부(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수도권 북부 고양시, 구리시, 파주시, 의정부시, 인천시, 수도권 남부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의 분석 모델의 응용

3. 연구 모델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된 피시바인모델에 의거하여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변인들의 변형을 거쳐 구성된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즉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다음 피시바인 모델에 의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변인 중 자녀와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더불어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변수들인 일반적 특성 변인, 경제적 특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종속변수의 경우 이분변수로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이 있는 고령자(=1)와 이용의향이 없는 고령자(=0)로 구분되었다. 독립변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관적 규범의 준거인들의 생각은 모두 3문항으로 자녀, 배우자, 친구나 친인척이 제도 이용에 대해 찬성하리라 생각한다는 답에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주택은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주택연금 이용에 장애로 생각된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체면때문이다, 제도 이용시 노후 자녀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후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항 모두 위와 같은 응답 카테고리의 5점 척도를 사용하다. 의식적 행동통제 역시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종속변수인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의 경우 '이용의향이 있음'과 '없음'으로 응답된 이분변수이고, 여기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특히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의식적 행동 통제변수의 영향력과 더불어 객관적 경제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총 5가지 영역에 변수를 투입하여 상대적인 변수의

〈표 1〉 독립 변수의 측정

분류	변수 측정	
주관적 규범 (SN: 준거인, 사회적 규범)	준거인들의 생각 -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 -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배우자의 찬성 -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들의 찬성	3문항
행동에 대한 태도(AB: 주택연금제도이용에 대한 노인의 태도)	(부정적 결과) - 주택은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 제도 이용에 대한 사회적 체면 (긍정적 결과) - 제도 이용시 노후 자녀부담 감소 예상 - 제도 이용시 노후 삶의 질 향상 예상	4문항 (각 2문항)
의식적 행동 통제(PBI: 주변사람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결정 내리는 판단 능력)	-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자산관리에 대한나의 생각에 비추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2문항
객관적 경제 상태	-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여부 - 노후준비 여부 - 월 소득* - 월 소비지출* - 주택가격*	각 1문항
일반적 특성	- 교육수준 - 주관적 건강상태 - 주택상속 의향	각 1문항

* 설문문항이 카테고리 변수임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SAS 9.1 ver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 취업여부에서는 두 집단간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의 경우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의 고졸이상의 비율이 2배 이상에 이르렀다. 건강상태 역시 제도의 이용의향이 없는 노인이 건강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 이상 많아 이용의향 없는 집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의 경우 이용의향 없는 집단은 월평균소득 및 소비지출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소유주택 5억 이상의 비율도 약 4배 가량 많았다. 반면 이용의향 없는 집단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는데, 경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 이용의향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평균 총자녀수가 많거나 아들이 많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살펴보았다. 이용의향이 있는 경우 기혼 자녀수와 평균 딸 수가, 이용의향 없는

〈표 2〉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 유무별 집단의 특성

[N=227, 단위:%]

		이용의향 있음 (N=60)	이용의향 없음 (N=167)
개인적 특성	성별 (남성비율)*	50.0	46.1
	평균 연령	62.3(세)	62.1(세)
	교육수준 (고졸이상 비율)*	20.0	47.9
	건강상태 (건강하다 응답한 비율)*	41.7	62.9
	취업여부 (무직인 비율)*	53.3	50.9
경제적 특성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상 소득 비율)*	48.3	55.7
	월평균 소비지출 (200만원 이상 지출 비율)*	20.0	34.2
	노후대비를 한 경우	60.0	62.9
	소유주택 (5억 이상 비율)*	5.0	19.2
	거주형태 (아파트거주비율)*	53.3	45.5
자녀 관련	총자녀수	2.8명	2.6명
	(기혼+미혼)	(2.3+0.5)	(1.9+0.7)
	(아들+딸)	(1.3+1.5)	(1.5+1.1)
	자녀의 경제적 도움받는 비율	33.3	32.3

* 범주형 변수이므로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경우 미혼 자녀수와 아들 수가 약간 높았으나 각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차이였다.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여부는 두 집단의 비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2.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집단의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

별로 나누어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5> 참조). 먼저 전체 집단에서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자녀의 찬성, 사회적 체면 손상, 자녀부담 감소, 소비지출, 건강상태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여기서 오즈비는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즈비가 1이상인 경우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이용의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 3〉 성별에 따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준거집단)	이용의향						
	전체 (N=227)			남성 (N=107)		여성 (N=120)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주관적 규범 변인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배우자의 찬성 (높음)	-0.05 (0.44)	0.95	0.59 (0.75)	1.80	-1.21 (0.80)	0.30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 (높음)	-1.44*** (0.46)	0.24	-0.42 (0.81)	0.66	-1.70** (0.67)	0.18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의 찬성(높음)	-1.10** (0.45)	0.33	-1.93** (0.86)	0.15	-1.07 (0.73)	0.34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 (제도 이용의 부정적 결과)							
집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요소가 됨 (그렇다)	0.38 (0.42)	1.46	1.20 (0.80)	3.34	0.20 (0.64)	1.22	
사회적 체면의 손상 때문에 이용안함 (그렇다)	0.68* (0.40)	1.97	1.10* (0.66)	3.00	0.90 (0.67)	2.45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 (제도 이용의 긍정적 결과)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자녀부담 감소 예상 (그렇다)	-1.19*** (0.41)	0.30	0.11 (0.77)	1.12	-1.35** (0.66)	0.26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예상 (그렇다)	-0.35 (0.48)	0.70	0.00 (0.89)	1.00	-0.67 (0.72)	0.51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							
자산관리에 대한 나의 생각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29 (0.38)	1.33	-1.66* (0.85)	0.19	0.96* (0.58)	2.60	
노후준비에 대한 나의 판단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38 (0.47)	1.46	0.97 (0.90)	2.64	0.01 (0.69)	1.01	
일반적 변인							
소비지출 (높음)	-1.34*** (0.47)	0.80	-1.69* (1.02)	0.19	0.87 (0.68)	2.39	
주택가격 (5억 이상)	-0.14 (0.39)	1.34	0.32 (0.71)	1.37	-0.14 (0.60)	0.87	
자녀의 경제적 수혜 (안받음)	-0.23 (0.40)	1.74	0.85 (0.74)	2.34	0.45 (0.59)	1.57	
주택상속의향 (그렇다)	0.29 (0.24)	2.35	0.41 (0.43)	1.50	1.58*** (0.43)	4.86	
교육수준 (높음)	0.55 (0.46)	0.26	-0.90 (0.70)	0.41	-1.49** (0.73)	0.23	
건강상태 (좋음)	0.85*** (0.41)	0.87	-0.93 (0.75)	0.40	0.70 (0.66)	2.01	
상수	-3.76(1.27)***		-0.10(1.96)		-7.42(2.30)***		
-2 LogLikelihood Chi-square (df=14)	262.2(df=15)***		126.7***		135.0***		

*p<.10 **p<.05 ***p<.01

〈표 4〉 소득 정도에 따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준거집단)	이용의향								
	전체 (N=227)			상대적 저소득 (N=105)		상대적 고소득 (N=122)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주관적 규범 변인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배우자의 찬성 (높음)	-0.05 (0.44)	0.95	-0.33 (0.64)	0.72	-0.03 (0.88)	0.97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 (높음)	-1.44*** (0.46)	0.24	-2.50*** (0.82)	0.08	-0.90 (0.85)	0.41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의 찬성(높음)	-1.10** (0.45)	0.33	-0.63** (0.64)	0.54	-2.21** (1.01)	0.11			
행동에 대한 태도 (부정적 결과) 변인									
집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요소가 된다 (그렇다)	0.38 (0.42)	1.46	1.80 (0.89)	6.07	-0.44 (0.68)	0.65			
사회적 체면의 손상 때문에 이용안함 (그렇다)	0.68* (0.40)	1.97	0.72 (0.63)	2.06	0.62 (0.68)	1.85			
행동에 대한 태도 (긍정적 결과) 변인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자녀부담 감소 예상 (그렇다)	-1.19*** (0.41)	0.30	-1.34** (0.65)	0.26	-1.64** (0.70)	0.19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예상 (그렇다)	-0.35 (0.48)	0.70	0.04 (0.81)	1.04	-0.40 (0.97)	0.67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									
자산관리에 대한 나의 생각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29 (0.38)	1.33	1.62** (0.72)	5.04	-0.75 (0.67)	0.47			
노후준비에 대한 나의 판단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38 (0.47)	1.46	-0.12 (0.77)	0.88	1.44 (1.00)	4.21			
일반적 변인									
교육수준 (높음)	-1.34*** (0.46)	0.26	-0.32 (0.76)	0.73	-2.30*** (0.72)	0.10			
건강상태 (좋음)	-0.14 (0.41)	0.87	0.94 (0.70)	2.55	-0.73 (0.77)	0.48			
소비지출 (높음)	-0.23 (0.47)	0.80	-1.63 (1.14)	0.20	0.19 (0.72)	1.21			
주택가격 (5억 이상)	0.29 (0.39)	1.34	0.49 (0.63)	1.62	0.14 (0.66)	1.15			
자녀의 경제적 수혜 (안받음)	0.55 (0.40)	1.74	1.41** (0.68)	4.10	-0.11 (0.69)	0.89			
주택상속의향 (그렇다)	0.85*** (0.24)	2.35	0.65 (0.41)	1.92	1.00 (0.41)	2.72			
상수	-3.76(1.27)***			-8.20 (2.16)***		-0.25 (2.31)			
-2 LogLikelihood Chi-square (df=14)	262.2(df=15)***			129.4***		133.8***			

*p<.10 **p<.05 ***p<.01

1이하인 경우 이용의향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결과가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변인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분명했다. 남성은 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의 반대가, 여성은 자녀의 반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 가능성을 각각 85%, 8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부정적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 체면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한 단위 긍정적으로 바뀔 때마다 제도 이용의향 가능성은 3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긍정적 결과)에서는 여성만이 자녀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수준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의 경우 준거인의 주관적 규범과 고령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지라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본인의 자산 및 노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결과의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은 내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는 인식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81% 감소했으나, 여성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변인 중에는 남성은 소비지출 정도가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여성은 교육수준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집단의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 77%). 소비지출의 경우 지출수준이 높은 경우 필요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추가소득을 위한 주택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최은희(2006)의 결과와 관련이 있었으며, 학력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주택연금제도 인지도와 관계가 있다는 김진철(2007)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주택상속의향 정도가 한 단위 낮아질수록 여성 집단의

제도 이용의향 가능성은 4.8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선중·구본영(2005)의 주택상속의향이 낮은 집단의 제도 이용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두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상대적 저소득의 경우 주택연금제도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 변인, 주택연금제도로 노후자녀 부담 감소 예상 변인, 자산관리에 대한 통제 변인, 자녀의 경제적 수혜 변인이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 고소득의 경우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의 찬성 변인, 주택연금제도로 노후부담 감소 예상 변인, 교육수준 변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규범 변인에서는 상대적 저소득 집단에서 자녀가 반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91% 감소), 상대적 고소득 집단에서는 가까운 가족보다는 친구나 친인척의 반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다(89% 감소).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부정적 결과)에서는 상대적 저소득 집단에서 집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수준이 한 단위 낮아질 때마다 제도이용의향 가능성은 높아졌다(6.07배).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긍정적 결과)에서는 두 집단 모두 자녀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집단의 이용의향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였다(저소득 74%, 고소득 81%).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의 경우 상대적 저소득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즉 자산관리의 통제소재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 변인 중에는 상대적 저소득 집단에서는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 고소득인 경우는 교육수준과 주택상속의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는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집단의 이용의향 가능성이 4.1배

〈표 5〉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준거집단)	이용의향					
	전체 (N=227)		55-62세 (N=130)		63세 이상 (N=97)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주관적 규범 변인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배우자의 찬성 (높음)	-0.05 (0.44)	0.95	-0.48 (0.60)	0.62	0.96 (1.19)	2.61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 (높음)	-1.44*** (0.46)	0.24	1.46** (0.59)	0.23	-1.82 (1.33)	0.16
주택연금이용에 대한 친구나 친인척의 찬성(높음)	-1.10** (0.45)	0.33	-0.22 (0.62)	0.80	-2.20** (1.09)	0.11
행동에 대한 태도 (부정적 결과) 변인						
집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요소가 된다 (그렇다)	0.38 (0.42)	1.46	-0.48 (0.56)	0.62	1.04 (1.11)	2.83
사회적 체면의 손상 때문에 이용안함 (그렇다)	0.68* (0.40)	1.97	0.87 (0.55)	2.39	1.11 (0.99)	3.04
행동에 대한 태도 (긍정적 결과) 변인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자녀부담 감소 예상 (그렇다)	-1.19*** (0.41)	0.30	-0.11 (0.54)	0.90	-4.29*** (1.25)	0.01
주택연금제도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예상 (그렇다)	-0.35 (0.48)	0.70	-0.27 (0.61)	0.77	-1.22 (1.12)	0.30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						
자산관리에 대한 나의 생각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29 (0.38)	1.33	-0.14 (0.48)	0.87	1.46 (1.18)	4.32
노후준비에 대한 나의 판단에 비추어 이용 가능 (그렇다)	0.38 (0.47)	1.46	-0.03 (0.67)	0.97	-0.47 (1.37)	0.63
일반적 변인						
교육수준 (높음)	-1.34*** (0.46)	0.26	-1.05* (0.56)	0.35	-3.97** (1.70)	0.02
건강상태 (좋음)	-0.14 (0.41)	0.87	-0.78 (0.56)	0.46	1.07 (1.03)	2.92
소비지출 (높음)	-0.23 (0.47)	0.80	-0.12 (0.62)	0.89	0.39 (1.29)	1.48
주택가격 (5억 이상)	0.29 (0.39)	1.34	0.75 (0.54)	2.11	0.27 (0.91)	1.31
자녀의 경제적 수혜 (안받음)	0.55 (0.40)	1.74	-0.35 (0.65)	0.70	1.99** (1.01)	7.35
주택상속의향 (그렇다)	0.85*** (0.24)	2.35	0.50 (0.36)	1.62	2.24*** (0.69)	9.36
상수	-3.76(1.27)***		-0.29(1.81)		-11.7(3.93)***	
-2 LogLikelihood Chi-square (df=14)	262.2(df=15)***		147.3***		114.7***	

*p<.10 **p<.05 ***p<.01

증가하고, 후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집단의 제도 이용의향 가능성이 90% 감소하였고, 주택상속의향이 한 단위 감소할수록 집단의 이용의향 가능성이 2.72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구분에 따라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본 결과, 예비노인층의 경우 자녀가 제도 이용에 대한 반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77% 감소하였으며(주관적 규범 변인), 교육수준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 변인). 63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가족의 영향보다는 주변의 이용에 대한 반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89% 감소),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공정적 결과) 중 주택연금제도가 자녀부담 감소에 도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집단의 이용의향이 크게 감소하였다(99%). 일반적 변인 중에는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감소하였고(98%) 자녀의 경제적 수혜를 받는 경우, 앞선 결과와 일관되게 주택상속의향이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35배, 9.36배).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예비노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피시바인 모델을 적용하였다.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가족적 특성중 성별(남편과 부인), 연령, 소득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피시바인 이용의향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 변인,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 의식적 통제 변인은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의

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전체 집단의 경우 주관적 규범 변인, 행동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부정적 변인은 검증이 되었고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나, 성별이나 소득정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즉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은 제도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소득정도의 경우 상대적 저소득 노인의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이 주택연금제도 선택의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 대해서는 모델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은 가족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중 하나로 보았을 때, 가족은 노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와 친구 및 친인척의 의견이 제도 이용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제도이용을 통한 부정적 결과, 즉 사회적 체면이 깎이는 것과 긍정적 결과, 즉 제도이용이 노후에 자녀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인식하는 경우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 변인에서는 교육수준과 주택상속의향이 영향을 미쳤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고졸 이상), 주택상속의향이 낮은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경우 주택연금제도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u와 그의 동료들(2006)은 홍콩의 45~59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조사대상의 8.6%에 해당하는 무(無)자녀 집단의 이용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없는 경우 노후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더불어 자녀가 없는 경우 주택상속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지며 이는 대체적인 선행연구에서 주택상속의향은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은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부모의 의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부부로 샘플링 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라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제도 선택에 있어서 주변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으며, 여성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였다. 즉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있어 남성의 경우 주변 친인척이 반대할 것이라 여기는 경우, 사회적 체면이 손상될 것이라 여기는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 자녀가 반대할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예정이 있는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제도 이용이 자녀의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 여기는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자산관리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남성은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성은 반대로 낮아졌다. 일반적 변인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소비지출이 낮은 집단의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았다.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주택연금제도의 주요한 고려 변인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두 대상의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택연금제도 홍보 및 설명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소득정도에 따라 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상

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자녀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녀가 반대할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집을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제도 이용으로 노후에 자녀부담이 감소한다고 여길 경우, 특히 자녀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는 경우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주관적 규범에는 자녀보다는 친인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택을 상속할 예정이 없거나 주택연금제도로 자녀부담이 감소할 경우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일반적 변인에서는 상대적 고소득인 사람들의 경우 학력이 높을 때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철(2007)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제도의 선호도가 높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경우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남성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교육수준은 이용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해 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연령 집단별로 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예비노인 연령에서는 자녀의 제도 이용찬성 변인과 학력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노인 연령에서는 주변 친인척의 제도 이용 찬성변인과 거주주택 상속예정, 노후 자녀부담 감소 예상, 학력, 자녀의 경제적 수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노인 연령에서는 자녀가 제도 이용을 반대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의 제도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 노인의 경우 주변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으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나 친인척이 반대할 경우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나 특히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예정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용의향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녀와 관련한 변수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선희·김영훈, 2009; 최은희, 2006; 유선중·구본영, 2005), 주택상속의향은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상 제도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자녀로 인한 소득의 필요가 높다면 주택을 상속한다는 의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택연금제도는 노인이 자신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본인 재산 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이지만, 이에 대한 이용 결정은 가족에 대한 고려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가장 자녀를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가 제도 이용을 반대하거나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고자 할 때 이용을 극도로 꺼리고 자녀 부담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자녀에 대한 고려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대적 저소득 집단의 경우에도 자녀관련 여러 변인들이 제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쳤는데, 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었고, 자녀 부담 감소를 위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자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제도 이용의 장애요소로서 집을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도 이용을 통해 자녀에게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부담 감의 표출로 여겨진다. 55-63세 집단의 경우에는 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반대가 역시 제도 이용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 중에서도 자녀와 관련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둘째, 반면에 가족보다도 외부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더 의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남성 집단이었다. 이들의 주관적 규범은 자녀보다는 친구나 친인척으로 주변을 더 의식하였고 제도 이용을 통한 사회적 체면 손상을 더 염려했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인 집단과 63세 이상의 노인집단의 경우에 그러했다. 그러나 63세 이상인 노인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다르게 주변도 의식했지만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고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연금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에 대한, 또는 주변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이용을 촉진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식적 행동통제 변인, 즉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판단 능력 또한 제도 이용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자산관리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여길 경우 제도 이용의향이 낮아졌고, 여성이나 상대적 저소득노인의 경우는 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여길 경우 오히려 제도 이용의향이 높아졌다. 이는 주관적 규범 변인과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의 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전통적으로 남성의 경우 가족보다는 주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자녀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집단이었고 자신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과 상대적 저소득 집단의 경우 행동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결과(제도 이용시 노후 자녀 부담 감소 예상, 노후 삶의 질 향상 예상)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더 이용의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 여성 집단, 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상대적 고소득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제도 이용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객관적이며 논리적이어서 이러한 경우 제도를 비교적 신뢰하고 이용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보면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신체(50.1%)와 경제적 준비(44.7%)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욕구는 높으나(41.1%) 노후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욕구는 상당히 낮은 편(1.0%)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러한 현실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노년기를 맞게 되고 이는 더욱 현실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이나 상대적 고소득집단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대상들에게 주택연금제도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은퇴계획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가족지원(family support)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노후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양성 및 예산 지원 등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제적 대비 문제는 노후를 준비하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자생적으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세대가 자생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중년층은 이른 노후준비를 시작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

년기때 자녀 교육비로의 과도한 지출은 자신의 노후를 부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녀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노부모의 재산과 소득은 노부모의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평균수명이 어디까지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세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부모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줌으로서 각 세대가 각자의 경제적 역할을 함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수도권 노인에 맞추어져 있다. 일단 주택연금제도를 통한 소득이 일정정도 이상 되기 위해서 주택가격이 낮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대상이 되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지수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고 노령 농가의 노후소득부족 문제, 도시지역과는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 있음. 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연구도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가 2010년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용의향이라는 변수는 사회과학에서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대안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용의향이 실제로 이용으로 이어질 수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반드시 주택연금제도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지 본 연구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선택하였고 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하여도 가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이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를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들 선택을 가로 막는 요인들을 보다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변수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택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당시에 고려했던 사항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성호·김경아(2008).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 분석-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지, 24(3), 171-198.
- 2) 김선주·유선중(2006). 역모기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특성 분석. 국토연구, 50, 125-146.
- 3) 김수봉(2009). 역모기제도 활성화 방안. 보건사회연구, 156, 15-22.
- 4) 김안나(2007). 주택연금제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학회지, 30, 371-391.
- 5) 김영훈(2008).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진철(2007). 종신형 역모기지 수요자 인식조사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태완·양시현·최현수·김문길·우선희·박은영(2009). 2009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김희삼(2008). 노후소득과 자녀의 역할.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7-209.
- 9) 박정원·이인자(1998). 수입의류와 국내의류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복식학회지, 40, 109-119.
- 10) 양세정(2010).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35-159.
- 11) 유선중·구본영(2005).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의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45, 119-143.
- 12) 이선형·김영훈(2009). 수도권 노인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예비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연구학회, 32(3), 1-21.
- 13)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14) 이성림(2005a).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15) 이성림(2005b).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16) 임정기·홍은진(2011). 중고령층의 부모수발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51, 215-246.
- 17) 채구묵(2003).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참여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4, 65-98.
- 18) 최은희(2006).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 최정혜(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9(2), 611-627.
- 20) 통계청(2010). 2010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21) 통계청(2009). 2010 가계금융조사. 대전: 통계청.

-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한국주택금융공사(2008). 2008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 24) Ajzen, Icek(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Kuhl, J. and Beckmann, J.(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 25) _____(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 26) _____(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2e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27) Attias-Donfut, C., Ogg, J. & Wolff, F. C. (2005). European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and time transfers. European Journal of Ageing, 2, 161-173.
- 28) Chen, A. & Jensen, H. H.(1985). Home equity Use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9(1), 37-56.
- 29) Chou, K. L., Chow, N. W. S., & Chi, I.(2006). Willingness to consider applying for reverse mortgage in Hong Kong Chinese middle-aged homeowners. Habitat International, 30, 716-727.
- 30) Kutty. N. K.(1998). The Scope for poverty alleviation among elderly home-Owner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reverse mortgages. Urban Studies, 35(1), 113-129.
- 31) Leviton, R.(2001). Reverse Mortgage decision-Making.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3(4), 1-16.
- 32) Ong, R.(2008). Unlocking housing equity through reverse mortgages: The case of elderly homeowners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8(1), 61-79.
- 33) Rowlingson, K. & McKay, S.(2005). Attitudes to inheritance in Britain. Bristol: The Policy Press.
- 34) Venti, S. F. & Wise D. A.(1991). Aging and the income value of housing weal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4, 371-397.
- 신문자료
- 35) Market & Money(2011). 고령층 ‘100세 쇼크’... 주택연금 가입 급증. 2011. 1. 29.
- 인터넷자료
- 36) 한국주택금융공사. www.khfc.co.kr

- 투 고 일 : 2011년 8월 11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24일